

■ 서울은 맥두걸 유엔인권위 보고관

일 정부 공식사죄·배상이 군위안부 문제해결 핵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쟁기간에 일본군에 의해 광범위하게 강간과 구금이 이뤄졌으며, 그것이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범죄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죠.”

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게이 맥두걸(51·변호사)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 보고관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일본의 군대위안부를 ‘성적 노예’로, 군대위안소를 ‘강간센터’고 규정하는 보고서를 낸 맥두걸 변호사는 유엔의 공식적인 권고사항마저도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 배상 못지 않게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전쟁기간중 자행된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 범죄에 대해 처벌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



니다. 무력충돌 지역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성폭력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기소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지 ‘과거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50년 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현재 코소보, 우간다 등 세계 각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착탈대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는 2년여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굉장한’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치게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지역 민중의 힘을 믿습니다.” 글 이종규, 사진 윤운식 기자